

중국의 한일수교 기본인식 연구

- 정치 현실과 현상 인식의 부조화 맥락

양갑용*

목 차

- I. 서론
- II. 중국의 한일수교 환경 인식
 - 1. 국제 환경의 변화: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중국의 성장
 - 2. 한국과 일본의 국내 수요
- III. 중국의 한일수교 기본 관점
 - 1. 미 제국주의의 산물
 - 2. 미국의 이이제이 전략
 - 3. 중국 포위전략
 - 4. 중국 인식에 대한 평가: 현실과 인식의 부조화
- IV. 중국의 한일수교 인식의 맥락
 - 1. 중국의 대외 인식과 한일수교
 - 2. 중일 경제관계 개선과 한일수교
- V. 결론

한글초록

이 글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협정’ 체결을 전후로 한 한일수교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과정에 대한 중국의 공식, 비공식적인 인식과 시각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중국이 어떤 시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왜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관방(정부 성명서, 고위 관료의 인터뷰 자료 등) 자료와 연구자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수교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의 인식과 반응을 재구성하여 그 맥락과 인식의 흐름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일 기본조약’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른 국제 환경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인한 불안감을 폭넓게 갖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일 회담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긍정적이고 미시적인 변화에 천착하기 보다는 진영 논리에 입각한 체제 안보라는 최우선 가치로 한일수교 과정을 바라보았다. 당시 중국은 사회주의 발전에서 노출한 많은 산적한 ‘내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은 당위론 차원에서는 한일수교의 ‘불합리성’과 ‘침략성’을 인지했지만 제대로 대응 전략을 펼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한일수교가 동북아에 격랑을 몰고 오는 핫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두 트랙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달래고 일본과 손을 잡는 이중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동맹’도 ‘국가 이익’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일수교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한일수교, 중국, 인식, 국가이익, 중일관계

I. 서론

201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20세기 초반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한국과 일본이 새롭게 공식 국가관계

를 수립했지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역사문제, 위안부 문제, 영토문제 등 아직도 많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한일수교가 공식적으로 체결된 1965년을 전후하여 한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며, 북한도 굴욕적인 수교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었다. 이 글의 목적은 당시 동북아 지역 안보 환경에 일대 변화를 야기한 한일수교에 대해서 동아시아 일원이었던 중국은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이슈에 접근했을까하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에 걸쳐 봉건주의, 제국주의 세력과 의 싸움을 끝내고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민족국가를 건설한 중국은 겨우 15년이 지나서 또 다시 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자본주의 삼각동맹이 만들어지는 한일수교를 지켜보게 된다. 막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약진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게 당시 한일수교는 어떤 모습으로 비쳐졌으며, 이를 중국은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당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치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일조하고 50년이 지난 현재 우리가 한일 관계와 중국 변수를 사고하는데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글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이에 대한 중국의 공식, 비공식적인 인식과 대응 시각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중국이 어떤 인식과 시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왜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관방(정부 성명서, 고위 관료의 인터뷰 자료 등) 자료와 연구자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한일수교 시기 일련의 중국의 반응을 재구성하여 그 맥락과 인식의 흐름을 검토하고자 한다. 당시 중국의 국내외 환경 인식은 중국 내 학자들의 견

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일 조약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은 중국의 공식 반응이나 고위 당국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접근했다. 한일수교 과정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인 자료들이 비교적 많이 있어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주로 중국의 인식과 인식 변화에 맞춰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한일수교 환경을 국제환경 측면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중국의 성장 전략 관점에서 살펴보고, 국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의 한일수교 기본 인식을 미제국주의 산물, 미국의 이이제이 전략, 중국 포위전략 차원에서 보고 이것이 현실과 인식의 부조화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4장에서는 그럼 왜 중국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는지를 중국의 대외 인식과 중일 경제관계 개선의 필요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II. 중국의 한일수교 환경 인식

1. 국제 환경의 변화: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중국의 성장

한일 회담이 오랜 기간 협상 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수교 협상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국제 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큰 변수는 베트남 전쟁과 이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의 역할, 그리고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으로서의 양국 간 수교 필요성이 있었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1964년 8월 2일 베트남 톱킹만 사건으로 베트남 전쟁이 촉발되었다. 당시 미국은 이 전쟁을 구실로 아시아 지역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당시 전쟁을 수행하던 미국은 한국에 파병 요청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간절했으나 한국의 병력을 빼낼 경우 한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 또한 갖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일본과 한국의 수교가 필요했다는 점이다.¹⁾ 물론 톱킹만 사건으로 중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으며 미국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후방기지가 필요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다른 국제환경의 변화는 바로 중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중국과 미국의 경쟁 구도가 한일수교를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즉, 1964년 1월 27일 중국과 프랑스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공식적으로 서방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964년 10월 16일에는 중국이 다시 원자탄 실험 성공 등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 되는 시점에서 이를 타개할 공산으로 미국이 한일 국교정상화를 진행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수 못지않게 중국 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 환경 요인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촉진했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국내 수요

먼저 한일수교가 필요했던 일본의 내부 요인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예컨대, 1960년대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일본 내부의 독점 자본 세력이 자본의 확산을 위하여 한일수교

1) 王德復, “論60年代日韓關係演變及其影響”, 『外交學院學報』, 第4期(1997), pp. 38-39.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견해이다. 다른 한편 고속 성장 시기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안전 보장 전략과 상품, 자본 시장의 시선으로 한일 관계를 보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한일 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분석이다.²⁾ 한국에서는 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이 취약한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하여 경제발전을 통한 성과의 확산으로 정통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한일수교의 동력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리춘칭(李純靑)은 ‘한일수교’를 일본의 신식민주의 확장의 연장선 위에서 이해하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국내 상품 시장과 원료 시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새로운 식민주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의 배후에는 미국이 힘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침략에 대한 도움 지역으로서의 일본의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변화, 일본의 경제조건 개선 의지, 한국의 내외 환경 변화(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 일본 자체의 전략적 필요성(일본의 안전 보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결국 한일수교가 이루어진 배경으로 중국내 보편적인 인식은 국제 환경의 변화, 이에선 미국의 세계 전략과 중국의 성장에 따른 영향력 증대,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국내 환경의 변화, 예컨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 주체로서의 일본의 실질적인 도움 필요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다른 한편 일본 또한 국내 시장의 수요에 기반을 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는 등 한일수교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촉진 요인이 있었다는 점이 중국 학계에서는

2) 安成日, “第七次日韓會談與‘日韓條約’的簽訂”, 『日本研究論集』, 第7集(2002), pp. 12-13.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에 따라 상호 수교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정상화’는 회담 시작 이후 14년을 지나고 체결되었다. 정영순(丁英順)은 이에 대해 양국 간 민족 감정이 존재했기 때문³⁾으로 분석한다. 바로 이러한 민족 감정으로 인해 ‘한일 국교정상화’가 정상적인 단추를 끼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한일 간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일수교 50년을 맞는 오늘까지도 이러한 시각은 중국 내에서 여전히 보편적인 인식과 시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국내외 배경 요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했지만 1965년 당시를 포함하여 한일수교 협상 전 과정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은 우리의 인식과 달리 매우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III. 중국의 한일수교 기본 관점

중국은 한일수교를 전후하여 정부 성명,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그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일 기본조약’은 미국의 음모가 내재된 제국주의 산물이며, 일종의 미국판 ‘이이제이’ 정책의 결과물이고, 최종적으로 중국을 포위하여 공격하려는 일종의 전쟁 책략이라는 사실로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일 회담’과 ‘한일 기본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한국의 국교정상화 반대 입장 움직임에 지지를 표시하면서도 명시적으로 ‘한일 회담’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3) 丁英順, “日韓邦交正常化談判及其影響”, 『日本學刊』, 第5期(2007). pp. 56-59.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⁴⁾ 이것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4장에서 언급했다. 중국의 대외 인식과 중일 경제관계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중국이 한일수교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1. 미 제국주의의 산물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미국의 세계질서 구도 하에서 미국의 의도에 따른 피동적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인식한다. 또한 미국의 의지가 개입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바로 일본을 군국주의로 부활시키고 있다는 시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1954년에 발간된 『세계지식(世界知識)』에서 안민(安民)은 “일본이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시 경제적으로 부활하고 다시 파시스트 길로 나아가고 있다”⁵⁾고 언급했다. 이는 한일수교가 미국의 음모의 결과라는 보편적인 시

4) 중국은 1965년 6월 26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월23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 박정희 반동파의 죄행을 엄중하게 꾸짖었다. 즉 박정희 집단과 일본정부가 이번 ‘한일회담’ 중 조인한 ‘조약’과 ‘협정’은 완전 무효라고 정중하게 선포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앞으로 일본 내 인민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과 함께 미일제국주의가 기도하고 있는 침략적 군사 집단을 반대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침략 전쟁 발동에 대해서 견결하게 투쟁할 것이다.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엄정한 입장을 견결히 지지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중국의 의중을 드러낼 뿐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반대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5) 安民, “美國加緊復活日本軍國主義是對亞洲和平與安全的威脅”, 『世界知識』, (1954年 7月 12日), pp. 13-14.

각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음모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 공산당, 남조선 인민, 일본의 진보주의자들, 아시아인들이 연대하여 미국의 음모에 맞서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 위에서 ‘한일 조약’의 반대는 일본 군국주의부활의 반대이고 미국의 베트남과 아시아 침략에 대한 반대로 간주되었다. 당시 중국의 부총리 천이(陳毅)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인민은 영웅적인 일본 인민과 조선 인민의 미일반동파를 반대하는 일련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한다고 천명하기도 했다.⁶⁾

중국은 1965년 6월 26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미 제국주의가 연출한 ‘한일 회담’의 추악한 짓거리는 일본 사토정부(佐藤政府)와 남조선 박정희 괴뢰 집단의 장기간 흥정을 통해 이미 최근에 황급히 처리되었다. 6월 22일 사토정부와 박정희 집단은 조선(북한)과 일본 양국 인민의 강렬한 반대와 세계 인민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슴없이 ‘한일 기본조약과 기타 일련의 ‘협정’을 조인했다. 이는 미 제국주의가 조선 영구 분열을 기도하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아울러 일본과 박정희에게 그를 위한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에 복무하도록 하는 일종의 엄중한 절차”라고 하여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일련의 과정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았다. 즉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일 기본조약’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 일환

6) 중국 부총리를 맡고 있던 천이(陳毅)는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1965년 12월 30일 일본 『적기보(赤旗報)』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 제국주의는 중국 인민의 적이며 또한 전 세계 인민의 공동의 적이다. 미 제국주의는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 통제, 간섭, 침략과 위협을 가하고 세계를 홀로 제패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 미국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결연하게 반대하는 것은 전 세계 인민의 근본 이익의 소재이다. 나는 깊이 신뢰한다. 우리들의 이러한 엄정한 입장은 세계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반드시 전 세계 인민의 동정과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당시 중국이 갖고 있던 세계 정세를 보는 인식의 일단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기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일한기본조약’ 체결은 완전히 미 제국주의가 아시아에서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추진한 산물이다. 미 제국주의가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한 목적은 일본 군국주의를 시급히 부활해서 일본 세력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동북아 군사 연맹’을 만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일한기본조약’은 미 제국주의가 극동에서 긴장을 한층 더 심화하는 조약이며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온상이 되는 조약이다. 이것은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의 근본 이익을 위반했고, 게다가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다.”⁷⁾고 평가하는 시각 또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아예 미국의 음모라고 보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공산당 베이징(北京)시 당위원회 발행 『전선(前線)』에 따르면 “‘한일 회담’은 오랜 기간 미국이 준비한 일종의 큰 음모”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 다음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미 부활한 일본 군국주의를 한국으로 끌어들여 한국의 식민 통치를 공고히 하고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자본을 이용하여 미국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미국의 전략이라는 점이다. 둘째, 일본과 한국을 연결시켜 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여 한국을 사회주의 진영을 도발하기 위한 진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의 계획은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여 소위 말하는 새로운 ‘군사 방패’를 만들어 일본을 핵심으로, 일본과 한국, 타이완을 연결하는 소위 ‘동북아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점이다.⁸⁾

중국의 이러한 시각은 이미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전인 1965

7) 梅汝璈, “〈日韓基本條約〉透視”, 『世界知识』, 第20期(1965), p. 8.

8) 文生, “美國在亞洲給自己制造的新絞索”, 『前線(半月刊)』, 第5期(1965), p. 24.

년 2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일 회담’과 ‘한일 기본조약’ 반대 성명 지지에 관하여>라는 성명서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당시 외교부는 “‘한일 기본조약’은 미 제국주의가 일본 군국주의를 도와서 조선 반도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동북아 군사동맹’을 연출하고 극동 지역 긴장을 한층 강화하는 엄중한 조치이다. 이는 조선 인민, 일본 인민과 아시아 각국 인민의 엄중한 도전”이라고 보았다. 특히 ‘한일 기본조약’ 체결 자체를 양국 간 사무가 아니라 미국의 조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일기본조약’의 서명은 미 제국주의의 직접 조종 아래 진행된 것이다. 미 제국주의는 줄곧 일본 통치 집단과 남조선 괴뢰 정부에 ‘한일 회담’을 진행하도록 했고, 일본과 남조선을 연결하여 ‘동북아 군사연맹’ 조건을 만들어냈다”는 성명서 내용이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 미국의 이이제이 전략

물론 중국이 명시적으로 미국이 이이제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아시아인으로 아시아인을 친다(亞洲人打亞洲人)’는 표현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국이 자기 방어적 관점에서 미국의 의도를 읽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줄곧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아시아인에 대한 침략과 도전으로 인식한다. 이를 중국적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침략 준비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한일수교는 중국이 아닌 아시아 차원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일 기본조약’, 베트남 전쟁 참전 등 일련의 일들을 미국의 아시아 이이제이 전

략이 연출한 결과로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한일수교를 미국의 ‘나쁜 전략’으로 간주하고 이를 아시아의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인식에 따르면, 미국은 전후 한국과 일본 점령을 통해서 서방식의 정치제도를 이식시키고 한국과 일본을 자본주의 진영으로 묶어서 공동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시킨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안보 차원의 자원을 제공해주고 안전 보장을 도모하게 했다. 또한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으로 일치된 가치를 이식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삼각 동맹체제로 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이른바 ‘민주 동맹’은 일종의 미국식 가치와 규범을 장기적으로 ‘민주 질서’의 이름으로 북한에 적용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가졌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역시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일 기본조약’을 미 제국주의의 아시아에 대한 행동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회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른바 북한 인민, 남한 인민, 일본의 진보적 인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이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중국은 1965년 2월 27일 외교부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은 조선 인민의 ‘한일 회담’ 반대와 ‘한일 기본조약’ 철폐의 정의로운 투쟁을 굳건히 지지한다”고 했다.¹⁰⁾ 아시아인의 단결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인식 밑바탕에는 미국의 전략 변화가 아시아인의

9) 巴殿君, 王勝男, “邦交正常化50年: 日韓關係沒那麼差”, 『世界知識』, 14期 (2015).

10)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1965년 2월 27일)

분열을 획책하는 기반 위에서 진행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대한 간섭 등이 노골화 되고 미국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필리핀과 태국 인민들의 움직임이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벌어진 한일 회담이야말로 바로 ‘아시아인을 통해서 아시아인을 친다’는 미국의 숨겨진 전략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1965년 11월 16일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서는 “시대가 변했다. 오늘의 아시아는 이미 어제의 아시아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이미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아시아 인민의 주력이 되었다. 미 제국주의는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아시아인이 아시아인을 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북한) 침략 전쟁에서 통하지 못했고, 베트남 침략 전쟁에서도 통하지 못했다. 어떠한 아시아 국가를 침략하는 전쟁에서도 통하지 못했다. 미 제국주의의 이러한 결과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한 아시아 각국 인민, 즉 일본 인민, 조선 인민, 베트남 인민, 인도네시아 인민, 중국 인민 등이 한층 긴밀하게 단결하도록 했으며 상호 지원하고 공동 분투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자를 철저히 패퇴시켰다”¹¹⁾고 하여 미국의 이른바 ‘아시아 인으로서 아시아 인을 친다’는 전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미국이 중국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일 기본조약’ 체결 또한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시나리오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결과라고 인식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한국, 타이완,

1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1965년 11월 16일)

필리핀, 남베트남, 라오스, 태국 심지어 인도 등지에 건립되는 5백여 개의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며 중국은 이를 아시아 국가들을 통해서 아시아를 포위하려는 전략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¹²⁾ ‘한일 조약’은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아시아 침략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천이(陳毅) 부총리도 1965년 12월 30일 일본 『적기보(赤旗報)』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토 정부가 강행 통과시킨 ‘일한 조약’은 미 제국주의가 아시아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려는 음모의 하나의 엄중한 조치이며 일본 반동파가 군국주의를 부활하고 동북아 군사동맹을 조직하여 미국 침략전쟁에 공개적으로 참여하려는 결심을 보인 일종의 엄중한 조치이다. ‘일한 조약’의 침략의 칼끝은 조선 그리고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를 향하고 있다”고 하여 ‘한일 기본조약’ 체결이 미국의 아시아인들의 분열을 통한 중국 포위 전략으로 인식하는 일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결국 “미 제국주의가 일본 사토 정부와 남조선 박정희 괴뢰집단에게 ‘일한조약’을 맺게 하여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가속하였다”는 격한 논조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 포위전략

따라서 중국은 ‘한일 기본조약’을 한국과 일본의 당사국 간 조약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랜 기간 준비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으로 인식한다. 이를 또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일종의 이른바 ‘중국 포위전략’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한다. 즉 그래서 한일수교는 당사국간 교섭에 따른 협정 체결이 결코 아니었다는 시각이다. 중국은 1965년

12) “美帝國主義正在加緊準備進攻中國”, 『江漢學報』, 01期(1966), pp. 40-41.

6월 26일 정부 성명에서 “오랜 기간 미 제국주의는 줄곧 적극적으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키웠다. 일본과 남조선 반동파를 서로 엮어서 일본을 중심으로 남조선 괴뢰 집단과 장제스(蔣介石) 잔당 세력을 도와 ‘동북아 군사동맹’을 획책했다. 아울러 ‘동남아 조약 조직’과 연계하여 아시아의 통일적인 침략 군사 체제를 만들어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와 기타 평화 애호 국가에 맞서 아시아인이 아시아 인을 치게 하는 계획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당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기 위하여 한일 회담을 추진했다는 시각이다. 적어도 중국은 한일수교를 이러한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1965년 6월 26일 정부 성명에서 중국은 “최근 미 제국주의의 아시아에서의 침략 활동이 연속해서 실패하고 특히 베트남 침략 전쟁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는 적극적으로 일본과 박 반동파¹³⁾의 ‘한일 회담’을 촉진했다. 이는 바로 아시아인을 이용하여 아시아인을 치는 죄악 음모의 일환”이라고 하며 그 최종 목표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당시 포면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절대로 일본 정부와 박정희 집단이 체결한 소위 ‘한일 기본조약’을 승인하지 않는다. 6억 5천만의 중국 인민은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조선 인민, 일본 인민과 함께 그리고 아시아 각국 인민과 함께 미 제국주의가 일본과 박 반동파를 이용하여 침략을 확대하는 음모를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¹⁴⁾이라고 대내외 천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크고 격한 목소리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오지 않아 결국 ‘말

13) 문맥상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가리킴

1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1965년 6월 26일)

의 유희'에 의한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 중국의 전략적 고민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는 '한일 기본조약' 체결이 이른바 1965년 11월 16일 정부 성명과 같이 "일본 사토 정부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매우 빠른 엄중한 행보이며 미 제국주의가 일본 반동파를 엮어서 아시아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엄중한 행보"¹⁵⁾라고 비판하고 "아시아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체하지 않고 '일한 조약'을 체결한 이유"라고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미국에 맞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중국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 선언적인 '격한' 메시지만 던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중국 인식에 대한 평가: 현실과 인식의 부조화

중국은 한일수교 당시 결코 명시적으로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반대하지 않았다. 대부분 간접 화법이나 선언적인 의미의 언술만 구사했다. 예컨대 "일본 인민은 바로 일본 공산당이 6월 23일 성명에서 이들 '조약'과 '협정'은 일본과 조선 양국 인민의 이익을 침범한 것이고 일본 인민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일한 기본조약'의 조인을 강렬하게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성명서에 인용하여 그 반대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었다. 1965년 11월 16일 중국의 정부 성명에서도 "일한 조약은 일종의 침략적 군사 조약이다. 이 조약은 조선을 겨냥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사토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극대한 분노와 항의를 표하지 않을 수

1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1965년 11월 16일)

없다”라고 하면서도 어떠한 분노와 항의를 표시했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물론 중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현실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반대 세력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은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미 제국주의의 일본과 박 반동파를 연계시키는 죄악 활동을 강렬하게 비난한다. ‘한일 기본조약’과 기타 관련 협정의 조인은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에 대한 엄중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 인민과 아시아 각국 인민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뿐이었다.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아가는 것을 매우 우려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일 기본조약과 기타 유관 ‘협정’의 조인은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의 극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조선 북방과 남방, 일본 각지에서 거대한 미 제국주의, 박정희 매국집단과 사토 정부를 반대하는 군중 운동이 출렁였다.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의 미국 반대와 애국의 정의로운 투쟁은 아시아와 세계 각국 인민의 광범위한 동정과 지지를 얻었다. 단언컨대英勇적이고 용맹한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의 면전에 그리고 각성한 아시아인의 면전에 미 제국주의의 일체 음모와 간계는 모두 철저하게 파괴될 운명을 맞을 것이다. 사토 정부와 박정희 집단은 기꺼이 미 제국주의를 따라 조선 인민, 일본 인민과 아시아 각국 인민을 적으로 만들었으며 결국에는 미 제국주의를 위해 순장자가 되는 치욕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호기어린 성명을 발표했지만 여기에서도 어떠한 조직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 의제에 대한 인식의 부조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굳이 미국을 직접 상대

하기에는 당시 중국 국내적 요인이 매우 복잡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일기본조약 인식은 기본적으로 냉전 사고에 기반을 둔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 성명 등 각종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뾰족한 탈출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방의 제한적인 인식의 한계와 현실과 인식의 부조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민방의 논의는 매우 활발했다. 예를 들어 중국내 한일수교 관련 연구자들 가운데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는 조약으로 인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10년 8월 22일 이전 한국과 일본 간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1910년 한일 강제 조약에 대한 모호한 처리가 역사 청산을 회피하는 것으로 되어 향후 일련의 침략과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평가이다. 특히 중국의 또 다른 견해는 1910년 8월 22일과 이전에 체결한 조약이 무효라고 쌍방이 ‘확인’했다는 점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일종의 완전한 사기라는 시각이다. 1905년 ‘을사늑약’과 1876년 일명 ‘강화도 조약’ 등은 이미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종의 ‘선물’로 ‘대한민국’에게 준 것이 우스운 일이라는 시각이다.¹⁶⁾

다음으로,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적용 범위를 한반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남한으로 한정할 것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일부 연구자는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반도 합법 정부로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

16) 梅汝璈 (1965), p. 9.

으며 어떠한 조선 인민도 대표하지 않으며 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합법 정부’도 사실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서 한반도 합법 정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시각은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유엔의 결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생각하기로 유엔 역시 이른바 ‘미 제국주의의 어용 기구’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결국 당시 국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중국은 한일수교를 냉전적인 시각에서 투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셋째, 재일 한국인 법률 지위 문제, 참정권을 제외하고 일본인과 동등 지위를 주장하는 한국과 영주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이 엇갈려 있다는 판단으로 한일기본조약이 서둘러 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영토문제, 특히 독도 문제 관련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과 답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논쟁을 남겨두었다(擱置爭議)는 시각이다. 이는 이후 한국과 일본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이며, 기타 어업협정 문제 등도 한일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일수교 당시 격한 언어에 부합하는 어떠한 실효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개입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다음 장에서는 중국이 당시 한일수교를 바라보는 대외 인식과 특히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매우 절실했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일단을 들여다볼 것이다.

IV. 중국의 한일수교 인식의 맥락

1. 중국의 대외 인식과 한일수교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에는 비단 파괴된 경제 회복에만 집중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준엄한 국내외 환경이 있었다. 당시 국내외 정세는 매우 험악했다. 국내적으로 20세기 전반기 50여 년을 전쟁 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국민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 기반 시설은 거의 대부분 파괴되거나 노후하거나 열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여러 복잡한 국내외 과제 중에서도 가장 급한 과제는 민생을 위해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을 추동하는 일이었다. 국제적으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진영 외교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활동 범위가 매우 협소해졌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은 신생국 중국을 공산주의 진영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중국을 상대로 적대 정책을 구사했다. 미국을 포함한 대중국 봉쇄와 제재, 물자 운송 금지 등을 서방국가에게까지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국내외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된 경제를 회복하고 생산을 정상화시키는 일에서 외부 원조를 필요로 할 정도로 중국은 국내적으로 매우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49년 중국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중심이 되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을 만들었다. 당시 경제 회복에 필요한 대외 무역의 필요성을 강령 제37조에 담았다. “일체의 합법적인 공사(公私) 무역을 보호하고 대외 무역 관제(官制)를 실시하고 보호 무역 정책을 채택한다”¹⁷⁾고 당시 중국의 대외

17) 『中共中央文件選集(第18冊)』(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2), p. 592.

무역 기본 준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폐쇄적인 쇄국 정책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외 무역을 진행하고 국내 무역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 틀 내에서 무역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¹⁸⁾ 쇄국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을 주장했으며, 비록 자력更生 위주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대외 원조에 문을 닫아걸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대외 무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물론 대외 무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기는 했다. 하지만 무역 자체를 거절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오히려 계약의 중요성과 신의를 지키는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외교 또한 이러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외 무역에 접근했다.

결과적으로 신중국 건립 이후 중국의 대외 인식은 비록 진영 논리에 경사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외 경제관계에서는 매우 실용적이었고, 실사구시(實事求是)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다. 그리고 이들 논의의 준거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민으로 관을 촉진하고, 민간이 먼저 나아간다(以民促官, 民間先行)’는 논리를 만들어 냈으며, 중일관계에서도 ‘중일무역 3원칙(中日貿易三原則)’, ‘정치 3원칙(政治三原則)’, ‘정치경제 불가분 원칙(政治經濟不可分原則)’ 등을 제시하면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했다. 민간 무역을 통해 민간 외교를 발전시키고, 민간 외교 발전을 기반으로 관방 외교로 진화하여 결국 중일 국교정상화 길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당시 중국이 갖고 있던 대외 전략의 한 단면이었다.

이러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중국의 실사구시적인 접

18) 徐行, 張松, “試論新中國成立初期周恩來的對外貿易思想與實踐”, 『中共黨史研究』, 第3期(2008), pp. 53-59.

근 논리와 사고는 한일수교 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행태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당시 국제적으로 진영 외교가 강화되면서 사회주의 권역과 자본주의 권역은 소련과 미국이라는 양태 진영에 편재되어 있었다. 비록 중소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해도 중국이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한 적은 없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일수교가 정치 외교적으로 양호한 중북관계를 위한 전략적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오직 격한 언어를 구사하거나 심지어 그 언어조차 북한의 논조를 인용하여 전달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여기에는 중국이 매우 전략적으로 국가 이익을 앞세워 대일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일수교라는 이슈가 중국의 국가 이익을 훼손하거나 중일 관계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신중국 성립 이후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먼저 경제 무역 관계를 건립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중국이 영국, 이집트 등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도 똑 같이 적용되었다. 이들 국가 모두 외교 관계 수립 전에 중국과 무역 관계를 먼저 건립했었다. 무역 관계와 외교 관계를 상호 보완의 양대 축으로 설정하여 접근한다는 중국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기저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장기 정책 과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일수교라는 격랑에 휩싸이는 것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은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일본과 국교 정상화 방침을 정했다. 예컨대 1955년 12월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국정협(全國政協)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중국은 일본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건립하는 것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다.¹⁹⁾ 비록 당시 일본이 바로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이에 개

의치 않고 정치와 경제 불가분의 원칙을 내세워 민간 무역 확대를 통한 외교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수교 회담이 진행되었다. 당시 진영 논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진영 논리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이슈를 바라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나 행위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접근할 수는 더욱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접 국가이며 혈맹 국가인 북한의 상황과 처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출로는 북한의 격한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선에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일본과는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지속시켜야 하는 두 가지 트랙이 가능했다.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진영 논리에서 사회주의권과 관계를 강화해야 하고, 경제 이익 관점에서 서방 국가와도 민간 무역을 확대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중국은 이 둘을 모두 취하는 전략으로 나아갔다. 사회주의 진영과는 관방 중심으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갔다. 일본 등 서방국가와는 관방이 아닌 민간 무역 위주로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 결과가 바로 한일수교를 둘러싸고 동북아 격랑이 일던 시기에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공조를 취하는 모습으로 '북한의 언어'를 인용하여 한일수교의 부당성을 알려나갔다. 일본과는 물밑에서 민간 무역의 이름으로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결국 한일수교라는 국제 이슈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가 이익을 상쇄하거나 약화시켜가면서 지켜내고 대응해야할 그리 큰 변수가 되지 못했

19) 萬宇, “戰後中日經貿關係回顧與展望”, 『經濟與管理』, 第22卷 第1期(2006), p. 99.

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격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당시 절박한 중국의 경제적 성과와 회복의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2. 중일 경제관계 개선과 한일수교

신중국 건립 이후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 기조는 마오쩌둥이 다음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마오쩌둥은 “먼저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 국가와 비즈니스를 하고 또한 자본주의 국가와도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여 체제의 차이를 경제 관계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²⁰⁾ 이러한 실용적인 시각은 제국주의 침략 당사자였던 일본과의 경제 협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당시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일 양국 인민은 모두 일본이 포츠담 협정에 따라 비군국주의를 실행하고 또한 민주화의 조건 하에서 평화 공존과 경제와 문화 건립에 있어서 협력할 것”²¹⁾이라고 명확하게 의중을 밝혔다. 물론 당시 중국과 일본은 정식 외교관계 수립 전이었기 때문에 ‘양국 인민’의 이름으로 중국과 일본의 경제관계 회복 필요성을 역설한 것일 뿐 사실상 중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특히 경제 관계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수교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만 해도 중국은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일본과의 전쟁, 국공내전 등을 거치면서 만신창이가 된 중국은 신중국 건립 이후에도 한 동안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가 여의치 않았다. 여기에 1.5계획 기간 반짝하던 경제는 다시 대약진(大躍進) 기간을 거치면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조정기(調整

20) 毛澤東, 『毛澤東選集』(北京: 人民出版社, 1991), p. 325.

21) 世界知識社, 『日本問題文件滙編(第1集)』(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55), p. 41.

期)를 거쳐 일부 경제 정책이 조정되긴 했으나 경제 성장률은 1960년대 초반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²²⁾ 당시 일본 또한 중국과의 경제 관계 회복과 확대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이 점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은 적성국 관계가 아니라 경제에서 상호 보완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협력 파트너였다고 볼 수 있다.²³⁾

중국의 대일본 경제관계 회복은 주로 정치적인 외부 요인을 고려하여 국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민간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의 무역교역이 꾸준히 이어졌다.²⁴⁾ 1950년대에는 비록 상호 무역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중일 관계의 연결 고리를 경제 관계를 통해서 꾸준히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정치적 긴장 관계와 진영 외교식 냉랭한 관계를 경제 상호 의존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본의 협력이 필요했고,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필요성에서 양국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는 일본의 신속한 경제 부흥에 따라 자원과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중국의 중요성이 차츰 부각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22) 미나미 료신, 마키노 후미오, 박정동 편저, 박정동 역, 『중국경제입문』 (파주: 생능출판사, 2007), pp. 24-25.

23) 일본은 신중국 성립 이전인 1949년 5월에 이미 일본에 일중무역촉진회(日中貿易促進會)와 일중무역촉진의원연맹(日中貿易促進議員聯盟)이 잇달아만 들어지면서 적극적으로 중일경제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중이었다.

24) 중국과 일본은 1950년대 네 차례에 걸쳐 중일민간무역협정(中日民間貿易協定)을 맺는다. 중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1960년 8월 27일에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정부협정(政府協定), 민간계약(民間合同), 개별고려(個別照顧)'라는 세 가지 중일무역 3원칙을 제안했다. 이는 당시 중국이 일본과의 경제관계 개선의 중요성과 적극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보호주의 정책의 강화는 일본의 탈출구로서 중국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이미 일본 내에서도 거대한 시장으로서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일례로 1962년 5월 1일 일본 정부 주최 최고 수출 회의에서 “중형 기계, 경형 기계, 화학 제품, 비금속 제품과 철강 등 7개 기업은 중국이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중국 무역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²⁵⁾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중국도 1960년대 초반 대약진 시기 추락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류샤오치(劉少奇)나 덩샤오핑(鄧小平)의 자본주의적 경제 수단이 활용되면서 대외 경제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기였다. 이러한 내적 요구에 따라 중국의 대일본 경제관계 회복은 점차 그 세력 범위를 넓혀 가는 중이었다. 심지어 1962년 9월 저우언라이 총리는 당시 중국을 방문한 마쓰무라 겐조(松村謙三)와 회담에서 “쌍방은 정치 3원칙²⁶⁾과 무역 3원칙 그리고 정치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해서 점진적인 누적 방식으로 양국의 정치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가지로 동의했다”²⁷⁾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

25) 王壽村等主編, 『中國對外經濟關係』(北京: 對外貿易教育出版社, 1988), pp. 263-264.

26) ‘정치 3원칙(政治三原則)’의 출현 맥락은 다음과 같다. 1957년 6월 2일 일본 수상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타이완을 방문, 장제스의 대륙 ‘수복’을 지지했다. 1957년 7월 25일 저우언라이 총리가 일본 기자와 회견에서 기시 노부스케의 중국 적대시 정책을 비난했다. 이 후 1958년 5월 2일 나가사키에서 일본 우익의 중국 국기 모욕 사건 발생하고 중일무역이 중단되면서 중국은 1958년 7월 7일 중일관계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일관계 ‘정치 3원칙’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일본 정부의 반중국 언행을 중지할 것, ‘두개의 중국’ 획책을 중지할 것, 양국관계 정상화를 방해하지 말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3원칙’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관계 발전의 제약 요인이 아니라 향후 결과적으로 경제관계 회복을 통한 정치관계의 발전이라는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7) 『人民日報』, (1962년 9월 20일).

했다. 이제 경제 관계를 뛰어 넘어 정치 관계의 상호 협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국 상호 관계를 확실하게 제도화한 조치가 바로 1962년 11월 9일 중국의 랴오청즈(廖承志)와 일본의 다카사키 다쓰노스케(高崎達之助)를 대표로 하는 양국 간 체결된 이른바 <중일 장기 종합 무역 비망록(中日長期綜合貿易備忘錄)>(일명 LT무역 비망록)이다. 이 비망록은 1962년부터 1973년까지 중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전후 중일 관계의 발전과 특히 중일 국교 정상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른바 중일 각서 무역은 1958년 5월 2일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일본 우익의 중국 국기 모욕 사건으로 중단된 중국과 일본의 무역을 종합 바터(barter : 물물교환)방식으로 회복하는 조치였다.

체결된 내용은 1963~1967년까지 5개년 간의 무역량은 왕복 5억 달러로서 수출입 액의 균형을 맞추고, 거래량은 해마다 연도 협정에서 체결하며, 연지급(延支給) 플랜트(plant) 수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서를 근거로 한 거래는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폐기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²⁸⁾ 중일 각서무역은 이후 1964년 4월 19일 랴오청즈와 다카사키 다쓰노스케 간 상호 대표 파견과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의 회담 기요(紀要) 및 기자 상호 교환의 회담 기요 서명으로 이어져서 중일 국교 정상화 기반을 다지게 된다.

사실상 LT무역 비망록은 정치 3원칙과 무역 3원칙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나눌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에서 만들어진 점 때문에 사실상 준 정부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 이후로 중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제도 틀을 갖추게 되었

28) 孫紅艷, “中日關係中的LT貿易”, 『長春大學學報』, 第17卷 第3期(2007年 5月), pp. 57-59.

다. 또한 이러한 제도 기반은 양국 관계가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 주재 상설 무역 대표부 설치, 주재 기자 교환 등으로 진화하여 사실상 관방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협정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의 무역은 1962년부터 문화혁명이 발발하기 전 1966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²⁹⁾ 또한 준정부간 협정 효과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가 정치관계로 발전하는 기본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일본의 민간 교류로 확대되어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의 결실을 맺게 되는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중일 무역액

(단위: 억 달러, %)

연도	무역 총액	증감율
1960	0.02	0.00
1961	0.36	1700.00
1962	0.74	105.00
1963	1.29	75.20
1964	3.02	133.64
1965	4.54	50.35
1966	6.03	32.78

출처: 무역 총액은 『中國對外經濟貿易統計年鑒』, 각 년도.

그러므로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양국 상호 경제 관계 지속 필요성은 한일수교 회담이라는 외부적인 변수가 양국 간 갈등을 유발하고 경쟁을 불사할 정도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일수교를 둘러싼 북한이 보인 격렬한 반응에 대

29) 王晶, “邦交正常化前中日經貿關係特點研究”, 『知識經濟』, 01期(2008), pp. 165-166.

응하는 중국의 의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원론적인 입장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중국은 북한과의 사회주의권 동맹을 강조하는 진영외교 입장에서 원칙적이며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대일본,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여러 공식 설명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격렬한 용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레토릭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유의 출발점은 바로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미 신중국 건립 초기부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일수교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결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일수교 협상은 중국에서 자신의 전략적 목표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흔들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니었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대일본 태도는 결국 중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³⁰⁾

V. 결론

한일회담 관련하여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원론적인 지지 입장과 아울러 중국이 처한 당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책략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은 지난 1965년 6월 26일 “미 제국주의가 연출한 ‘한일

30) 廖海敏, “50年代中日民間貿易述評”, 『史學月刊』, 第6期(1997), pp. 48-53.

회담'의 추악한 짓거리는 일본 사토(佐藤) 정부와 남조선 박정희 괴뢰 집단의 장기간 흥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6월 22일 사토 정부와 박정희 집단은 조선(북한)과 일본 양국 인민의 강렬한 반대와 세계 인민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슴없이 '한일 기본조약'과 기타 일련의 '협정'을 조인하였다. 이는 미 제국주의가 조선 영구 분열을 기도하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아울러 일본과 박정희에게 그를 위한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에 복무하도록 하는 일종의 엄중한 절차이다"³¹⁾라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의 논조는 북한이 1965년 6월 23일 발표한 성명서 기조와 내용이 매우 유사했다. 흡사 같은 성명서로 오해할 정도이다.

또한 중국은 정부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6월 23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 제국주의와 일본, 박정희 반동파의 죄행을 엄중하게 꾸짖었다. 즉 박정희 집단과 일본 정부가 이번 '한일회담' 중 조인한 '조약'과 '협정'은 완전 무효라고 정중하게 선포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앞으로 일본 내 인민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과 함께 미일 제국주의가 기도하고 있는 침략적 군사 집단을 반대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침략 전쟁 발동에 대해서 견결하게 투쟁할 것이다.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엄정한 입장을 견결히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여 북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는 "한일 조약은 기본적으로 강화조약(媾和條約)의 성질로 인식되나 '한일 조약'의 서명은 극동 아시아 두 반공 친미 국가를 하나로 연결하여 일본과 미국이 한국 '원조(援助)'상의 전략 '바꿔 메기(換肩)'

3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1965년 6월 26일).

를 실현한 것이며, 한미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또한 일본 상품과 자본의 한국 진입 조건을 만들어낸 것³²⁾이라는 평가를 가능케 하여 중국이 고립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회담’과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기본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중국은 국가 이익 관점에서 보면 북한과 행동까지 같이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한국은 양호한 회담 방안에 대한 디자인이 없는 상황에서 담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의 대일 담판은 불리한 영향을 가져왔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 원조를 얻어내기 위하여 대일 청구권 협상 권리를 방기했다. 이는 결국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역사를 진정으로 청산하지 못하게 되어 향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2차 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의 불협화음의 근본 원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통치의 역사에 있다”³³⁾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향후 한일관계가 순탄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잘못된 단추를 끼운 결과로 해석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서 국제 정치적 시각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른 국제 환경의 산물의 결과로 인식한다. 물론 한국과 일본 모두 국내적으로 수교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한일수교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의혹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국제 정치를 보는 인식이 지역 문제에 깊게 투사되

32) 安成日 (2011), p. 26.

33) 丁英順 (1965), p. 68.

어 나타난 일종의 안보 불안감의 다른 표현이었다. 당시 중국은 조정을 통해서 문화혁명으로 들어서는 국내 정치적 소용돌이에 진입하는 순간으로 산적한 국내 문제가 많아서 국외 문제에 관심을 덜 갖던 시기였다. 그러기에 주변 환경의 안정을 기대했으나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인해 불안감을 폭넓게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은 무엇보다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였다. 즉 미국이 한일수교라는 옷을 입고 중국 주변에 강고한 군사 동맹 체제를 구축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일 회담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긍정적이고 미시적인 변화에 천착하기 보다는 진영 논리에 입각한 체제 안보라는 최우선 가치로 한일수교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중국의 현실은 ‘포위’해 들어오는 외부의 ‘적’을 막아내기에는 아직 ‘내부’의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았다. 그러나 진영 논리에 입각한 당위론 차원에서 한일수교의 이른바 ‘불합리성’과 ‘침략성’을 인지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펼치지 못했다. 매우 ‘수세적’이며 ‘수동적’인 성명서만 남발했다. 여기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국가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격한 레토릭만 남발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일수교가 당시 동북아에 격랑을 몰고 오는 핫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두 트랙 전략을 통해서 북한을 달래고 일본과 손을 잡는 이중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동맹’도 ‘국가 이익’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일수교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과 시각의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미나미 료신·마키노 후미오·박정동 편저, 박정동 역, 『중국경제입문』 (과주: 생능출판사, 2007).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1965년 2월 27일)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1965년 6월 26일)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1965년 11월 16일)
- 천이(陳毅) 부총리 1965년 12월 30일 일본 〈赤旗報〉 인터뷰
- 毛澤東, 『毛澤東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91).
- 世界知識社, 『日本問題文件匯編(第1集)』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55).
- 王壽村等主編, 『中國對外經濟關係』 (北京: 對外貿易教育出版社, 1988).
- “美帝國主義正在加緊準備進攻中國”, 『江漢學報』, 第1期(1966年).
- 廖海敏, “50年代中日民間貿易述評”, 『史學月刊』, 第6期(1997年).
- 萬宇, “戰後中日經貿關係回顧與展望”, 『重慶三峽學院學報』, 第1期(2006).
- 梅汝璈, “〈日韩基本条约〉透视”, 『世界知识』, 第20期(1965).
- 文生, “美國在亞洲給自己制造的新絞索”, 『前線(半月刊)』, 第5期(1965).
- 徐行·張松, “周恩來與新中國外貿政策的制定和實施”, 『覺悟』, 第2期(2005).
- 孫紅艷, “中日關係中的LT貿易”, 『長春大學學報』, 第17卷 第3期(2007.5).
- 安成日, “論日本的朝鮮半島政策與日韓邦交正常化”, 『當代韓國』, 夏季號(2011).
- 安成日, “第七次日韩会谈与“日韩条约的签订”, 『日本研究论集』, 第7集(2002.5).
- 王德復, “論60年代日韓關係演變及其影響”, 『外交學院學報』, 第4期(1997).
- 王晶, “邦交正常化前中日經貿關係特點研究”, 『知識經濟』, 第1期(2008).
- 張玉梅, “六十年代中日民間貿易述略”, 『史學月刊』, 第5期(2000).
- 丁英順, “日韩邦交正常化谈判及其影响”, 『日本學刊』, 第5期(2007).
- 巴殿君·王勝男, “邦交正常化50年: 日韓關係沒那麼差”, 『世界知識』, 14期(2015).
- 『人民日報』 (1962.9.20).

对中国的韩日建交基本认识研究-政治现实与现实 认识不协调趋势

杨甲镛(成均中國研究所)

本文分析了1965年《韩日基本条约》签署前后中国对这一事件的认识,欲探究当时中国如何理解韩日关系正常化的过程。本文充分运用了官方资料和研究人员的二手资料。再次探讨了韩中关系正常化时期中国的反应,研究了中国对此问题认识的来龙去脉。

中国认为从国际政治观点来看《韩日基本条约》是伴随美国亚洲战略而产生的国际环境的产物。中国对韩日会谈所带来的经济波及效果等持有肯定的看法,而不关注微观变化。中国将以保障安全体制作为最优先选择的价值中心引发了韩日关系正常化。当时中国“内部”问题堆积如山。所以从合理性角度来认识韩日关系正常化的“不合理性”和“侵略性”,但没有指定应对战略。因为这与此时改善中日关系来发展经济的必要性有关。

因此对于韩日关系正常化,中国不得不采取了一方面稳住北韩,一方面与日本“牵手”的双轨战略。最终,从中国对韩日关系正常化的认识可以再次得出“同盟”也无法超越“国家利益”这一事实。

关键词

韩日建交, 中国, 认识, 国家利益, 中日关系